보훈처, 5·18 가해자 → '신군부 반란세력' 으로 첫 규정

42주년 기념식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개요 보도 자료서 3차례 명시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진전된 표현…보수정권의 5·18 규정 바로미터로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7일 배포한 자료에 '신군부 반란 세력'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 안내 자료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개요'를 서술한 대목에서 3차례에 걸쳐 '신군부 반란 세력'이라고 광주 유혈진압 계엄군 투입 세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기념식에서 언급되는 5·18민주화운동 개요 또는 경과보고는 집권세력이 5·18을 규정하는 척도로 박근혜 정부에선 '신군부' '집단 발포' 등 표현이 의도적으로 배제돼 5·18 홀대·왜곡 논란이 거셌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언론에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4 용지 6매 분량의 자료에서 단연 시선을 끌었던 것은 '5·18민주화운동 개요'를 기술한 마지막 페이지였다.

보훈처는 1980년 5월 18일 상황에 대해 "국가권력을 강점한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신군부의 반란 세력'이 동원한 군대와 충돌, 유혈진압 시작" 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21일 상황에 대해선 "'신군부 반란 세력이 동원한' 군대가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감행, 이후 광주 시내에서 퇴각해 광주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변경"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5월 27일 상황을 두고는 "신군부 반란 세력의 무력 진압 감행, 광주시민 해산"이라고 썼다.

이는 그동안 광주 유혈진압 세력에 대해 막연히 '계엄군'이라고 표기했던 과거와 달리. '신군부 반란 세력'으로 명쾌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훈처가 5·18기념식과 관련해 대외 공표한 자료에서는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또한 한 해 전인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사용된 '5·18민주화운동 개요'보다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인 지난해 기념식에선 1980년 5월 18일 상황을 두고 "국가 권력을 강점한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계엄군 충돌, 계엄군의 유혈진압 시작"이라고 표기했다. 또한 1980년 5월 27일 상황에 대해선 "신군부 세력의 무력 진압 강행, 광주시민 해산"이라고만 기술됐다. 5·18민주화운동 개요를 소개하는 한 페이지 분량 설명 자료에서 '반란 세력'이란 표현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념식 5·18 경과보고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2015년 대통령 박근혜, 보훈처장 박승춘 재임 당시 기념식에선 '신군부' '쿠데타' '집단 발포' 등이 빠진 채 5·18 경과보고가 낭독돼 5·18 왜곡·홀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5·18 상징을 넘어 아시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곡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또한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함께 부르는 '제창'이 아니라 합창단 합창에 맞춰 원하는 이만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진행돼 5·18 유족과 5월 단체는 물론 전국의 진보민주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보수정권 기념식 자료에서 '반란 세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5·18 관련 단체 안팎에서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겠냐", "정치인(국회의원)을 지낸 비(非) 군인 출신 보훈처장의 뜻이 담긴 게 아니냐" 등 의견이 나온다.

보훈처는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 자료에서 '신군부 반란 세력' 표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 기념식 준비 및 행사 검증 관련 위원회에 참석했던 민간 위원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정부기념행사 등을 점검하는 회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한 한 교수가 정부 기념식에서 사용하는 5·18민주화운동 개요 등 표현은 대법원 확정판결 등에 나오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보훈처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등 16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 지은 대법원 판결(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 대해 무기징역(1심은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5·18기념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애정을 드러내고 높게 평가해왔다"며 "보훈처가 대통령실과 조율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전한 슬픔…헌화하는 유족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1980년 당시 수습위원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故 윤영규 열사의 부인인 이귀임 여사가 헌화를 하기위해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주검 감싼 하얀 광목천, 전방·일신방직 직원이 내놨다

여공 2명 희생…자발적 나눔 실천
시민군에 김밥 제공 등 서로 도움도

5·18 기념재단이 1980년 5월 당시 전남·일신방직 직원들이 시민군에게 광목천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이 광목천은 당시 관이 동나버린 광주에서 계엄군에 죽은 이들의 주검을 감싸는 데 쓰였다.

기념재단은 지난해 10월 9일 정선희(67)씨의 목격담을 통해 1980년 5월 방직공장 직원들이 시민군에게 광목천을 건네줬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언에 따르면 정씨는 1980년 전방주식회사(전남방직) 부속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했다. 정씨는 5월 22일 오전 전남방직 정문에 있던 수위실에서 시민군의 트럭이 정문에 멈춰선 뒤, 공장 직원이 나와 광목천 2필을 트럭에 싣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23일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 사상자를 수습했던 정학용씨도 지난 1996년 진술한 증언에서 일신방직에서 광목천을 빌렸다고 밝혔다. 당시 정씨는 "전남도청 보사국장에게 지원동(주남마을) 상황을 설명하니 차를 타고 일신방직에 들려 광목을 얻었다", "(지원동에서) 일신방직에서 얻어왔던 광목으로 시체를 감아 도로가에 눕혀놓았다"고 증언했다.

주남마을 사건 사망자 중에는 일신방직 여공이었던 김춘례·고영자씨도 포함돼 있어 일신방직이 자발적 나눔을 실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민군과 전남·일신방직이 서로 긴밀한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신만식씨는 "24일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에서 김밥을 준다길래 12시께 전남방직에 들어가 김밥을 싣고 도청으로 갔다", "24일 오후 6시에도 일신방직에서 김밥 2상자를 싣고 도청 치안본부 사무실에 갖다 주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다른 시민군 2명과 함께 회사를 보호해 주며 숙직실에서 취침했다는 진술도 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전남·일신방직의 도움은 정신 없고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어렵던 시기에 광주 시민들이 똘똘 뭉쳐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숨은 조력자로 알려진 전남·일신방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유족회 아닌 시민단체 주관으로 사상 첫 추모제 열린 까닭은

공법단체 구성 놓고 유족회 갈등
올해 5·18행사위원회 주관 개최

5·18민중항쟁 제42주년 추모제가 5·18 유족과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추모제는 5·18묘지에 잠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일종의 제사로 줄곧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치러졌으나, 이번에는 42년만에 처음으로 시민단체 연합체격인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제수용품 준비 등 행사 전반을 주관했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는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유족과 여야 정치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5·18민중항쟁 42주년 추모제를 진행했다.

추모제는 정부기념식과 별개로 5·18유족회가 주관해 치렀지만 올해는 달랐다.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민중항쟁행사위 측이 제사용품 등 행사 전반을 준비했다. 다만 초헌·아헌·종헌 등 희생자 제례와 유족 인사말 등 추모식에서는 김영훈 전 유족회장과 박해숙 유족회장이 행사 전면에 나서 외견상으로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추모제로 비쳐졌다.

그러나 5·18 관련 단체와 추모제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5월 단체를 공법단체로 전환해 구성하는 것을 앞두고 유족회 내부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각종 고소·고발전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며 "이번 추모제가 유족회가 아닌 시민단체로 구성된 '5·18 행사위' 주도로 준비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추모제 참석 인원과 빈 좌석들을 봐라.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5월 단체의 중심격인 유족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실제 이날 추모제에는 200여개의 의자가 준비됐으나 자리를 채운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추모제 식순 등을 담은 소책자에 유족회장 이름이 잘못 적힌 것을 두고도 잠시 소란이 벌어지는 등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0억, 호텔/ 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21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오천경매. 010-3605-5000